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5.26(금) ~ 2023.06.01(목)

제공일시 2023 06 0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5.26(금) ~ 2023.06.01(목)

제공일시 2023 06 0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플라스틱 재활용 9%뿐...아예 생산축소가 해답일까

- 내년 말까지 플라스틱 규제에 관한 국제 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유엔 주도 국제 회의가 29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됐으나, 플라스틱 생산 축소를 주장하는 진영과 재활용을 강조하는 진영의 의견 차이로 논란이 예상됨
- 유엔환경계획(UNEP) 주도의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2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2) 회의가 이날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세계 약 200개국 정부 관계자 등 2천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AP통신이 전했다
- 노르웨이와 르완다가 이끄는 '대야망 연합' 진영은 플라스틱 생산 제한과 플라스틱 제조에 쓰이는 화학물질 규제 등 플라스틱이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집중한 국제 협약을 요구하고 있음
- 반면,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등은 플라스틱 폐기물과 플라스틱 재활용에 초점을 맞춘 국제 협약을 옹호하고 있음

(한겨레, 2023.05.30) 신기섭 기자

2.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의회 투표

- 유럽의회 의원들은 지난 2022년 2월 발표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에 대해, 366 대 225로 찬성 투표했음
- 최초 제안과 비교해서 EU의회에서 입장이 바뀐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스코프1,2,3 배출량을 포함해 지구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기후전환 계획을 시행하라는 지침으로, 기후 실사가 포함됨
- 이 규칙은 또 직원수 1000명 이상인 회사가 전환 계획의 목표에 대한 성과를 이사의 변동 보수와 연계하도록 요구함
- 제제 매커니즘도 포함되는데, 회사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 회사의 글로벌 매출의 5%까지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 EU 내 공공조달 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음

(ESGToday, 2023.06.01) Mark Segal 기자

3. EU, 기후변화에 대비해 소방대 2배 확대

- EU는 기후 위기로 인한 산불 증가와 같은 과제를 언급하며 2023년 여름에 대비해 항공 소방 함대를 두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음
- 지난 10년간 RescEU 프로그램 지원요청이 평균 350% 증가했으며, 지역의 산불 위험 및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의 홍수 등 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했음
- RescEU 소방항공기 예비대에는 10개 회원국 24대 비행기, 4대 헬리콥터가 포함되며 11개 회원국들은 프랑스, 그리스, 포르투갈에 주둔할 450명의 소방관을 파견한다고 밝혔음

(Reuters, 2023.06.01)
Charlotte Van Campenhout 기자

1. ESG 연계·신규 인증으로 '블루카본' 영토 넓힌다

- 해양수산부가 '블루카본 추진전략'을 발표하여 기업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와 연계, 민간의 블루카본 참여를 확대하고 신규 인증을 통해 블루카본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음
- 해수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차질 없이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양 탄소흡수력 강화 ▲블루카본 조성 참여 확대 ▲신규 블루카본 인증 등을 축으로 전략을 추진할 계획임
- 해수부는 해초류 등 기존 블루카본 뿐 아니라 비식생 갯벌 등 새로운 블루카본을 선제적으로 복원하고, '숨 쉬는 해안'을 조성해 탄소 흡수량을 늘릴 방침임
- 또, 국제감축 사업을 통해 국외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ESG 연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해양 탄소흡수원 외부 사업 활성화 등을 활용해 민간과 어업인,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음

(연합인포맥스, 2023.05.31) 이효지 기자

2. ESG 공시 의무화 대비...환경정보 공개 6월부터 시범시행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57개 기업의 환경정보를 '환경정보공개시스템(env-inf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음
- 이는 오는 2025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공개 시점을 기존 12월 말에서 최대 6개월 앞당긴 것임
- 대상은 지난 26일 기준 선(先)공개를 희망한 57개 기업으로, 강원랜드와 중소기업은행, 삼화페인트공업(주), 롯데물산, 주식회사 동인섬유, 부산정관에너지주식회사, 삼성엔지니어링(주), 한국엔컴퍼니, (주)다우기술, (주)오뚜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등임
- 환경부는 기업이 등록한 전년도의 녹색경영 전략·목표 및 시스템, 온실가스 배출량, 환경법규 위반 현황 등 환경정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검증을 거쳐 12월 말 공개해오고 있는데, 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수출 대기업과 상장사를 중심으로 환경정보를 조기에 검증받아 공개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음

(파이낸셜뉴스, 2023.05.30) 이유범 기자

3. 원희룡 "2025년까지 지속가능항공연료 생산할 것"

- 각국이 지속가능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예정임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열린 민간항공기구(ICAO) 글로벌이행지원심포지엄(GISS 2023) 패널토론에서, 내년에 SAF 타당성 시험을 거쳐 2025년 연료를 생산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음
- 또한, GS, 현대 등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 도심항공교통(UAM)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항공모빌리티(AAM)을 2025년까지 상용화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는데, 원 장관은 서울은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시범 프로젝트를 하기에 유리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활용해 기후변화 대응도 가능하다고 했음

(뉴스핌, 2023.05.30) 강명연 기자

1. 캐나다, 퀘벡의 GM-POSCO 배터리소재시설에 약 3억캐나다달러 제공

- 캐나다 연방정부와 퀘벡주는 GM-포스코케미칼을 위해 각각 1억5000만캐나다달러(약 1450억원)를 지원한다고 밝혔음
- 이들 회사는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를 위한 음극재를 생산하기 위해 퀘벡주 베칸쿠르의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6억캐나다달러(약 5800억)이상의 프로젝트 규모인 이 공장은 2025년부터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캐나다는 리튬, 니켈, 코발트를 포함한 광물 채굴의 본거지이며, 전기차 공급망 관련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해왔음
- 프랑수아-필리프 상파뉴 산업부 장관은 “이 투자는 퀘벡을 캐나다의 성장하는 전기차 공급망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음

(Reuters, 2023.05.30) Ismail Shakil 기자

2. 佛 첫 전기차 배터리 공장 문열어...토탈·벤츠·스텔란티스 합작

- 프랑스 최초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이 정부가 ‘배터리 밸리’를 구축하려는 북부 지역에 30일(현지 시간) 문을 열었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 프랑스의 토탈에너지,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 미국-이탈리아의 스텔란티스가 합작한 오토모티브 셀컴퍼니(ACC)가 앞으로 3년 안에 오프프랑스 광역주에 들어설 배터리 공장 4곳 중 처음으로 발을 뚫음
- 올해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인 ACC 공장의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능력은 올해 하반기 연간 13기가와트시(GWh)로 시작하여 2030년까지 연간 40GWh까지 늘려나갈 계획임
- ACC 배터리 공장이 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연간 전기차 50만대에 필요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고, 최대 2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의 설명임

(연합뉴스, 2023.05.31) 현혜란 기자

(뉴스웍스, 2023.05.31) 박영수 기자

3. 日 가와사키중공업, 수소수송 CO2배출량 산정방법 개발 국제를 추진

- 일본 가와사키(川崎)중공업이 수소를 운반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CO2)의 산정방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방침임
-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가와사키중공업은 제 3자 인증기관인 노르웨이-독일 선급협회(DNV)와 제휴해 개발할 CO2 배출 산정방법을 국제적인 룰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DNV는 제품의 생산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CO2의 총배출량을 보여주는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에서 경제산업성이 2023년에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협력한 실적등이 있음
- 가와사키중공업은 설정한 룰의 채택을 일본정부에도 제안할 생각이며,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소기본 전략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글로벌이코노믹, 2023.05.29) 박경희 기자

1. 현대차그룹, 중국에 첫 해외 수소연료전지 생산기지 구축(종합)

- 현대자동차그룹이 중국에 첫 해외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기지를 구축함에 따라, 향후 중국에서 생산되는 수소차에 국내 기술로 생산한 수소연료전지가 탑재될 전망이다
- 현대차그룹은 1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황푸구에서 'HTWO(에이치투) 광저우' 준공식을 열었음
- HTWO 광저우는 20만2천㎡(6만1천평) 부지에 스택 공장과 활성화 공장, 연구동, 사무동, 혁신센터 등이 8만2천㎡(2만5천평) 규모로 들어섰고, 연간 6천500기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능력을 갖췄음
- 현대차그룹은 중국 시장 상황과 중앙 정부 정책을 고려, 공급 물량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연합뉴스, 2023.06.01) 김보경, 이슬기 기자

2. HD한국조선해양 '호라이즌 유럽' 참여, 수소 시대 연다

- HD한국조선해양이 유럽연합(EU) 최대규모 연구혁신 프로그램에 참여, 수소 해상운송 시대를 선도하고 있음
- HD한국조선해양은 미국선급협회(ABS)와 드레스덴 공대 등 유럽 소재 산학연 총 14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오는 6월부터 대형 액화수소 화물창 기술 공동 개발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음
- HD한국조선해양 등 컨소시엄은 총 1000만 유로(약 140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4년간 투자, 16만 입방미터(m³)급 액화수소 화물창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음

(머니투데이, 2023.05.31) 이세연 기자

3. GS에너지, 포스코와 폐배터리 합작사에 투자 본격화

- GS에너지가 포스코와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합작법인에 828억원을 투자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음
- GS에너지는 전기차 충전 자회사간 합병 자본도 127억원을 투입하는 등 폐배터리 리사이클과 전기차 충전 등 미래 먹거리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음
- GS에너지의 자금 투입시기에 맞춰, 포스코그룹도 동일한 비율로 포스코GS에코머티리얼즈에 자금을 집행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됨

(파이낸셜뉴스, 2023.05.30) 김영권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05.26(금) ~ 2023.06.01(목)

제공일시 2023 06 0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세계은행 연구, 157개 기업이 세계 산업 배출의 60% 차지

[\(임팩트온, 2023.05.29\) 홍명표 기자](#)

- 세계은행의 최신 연구에 의하면, 157개 글로벌 기업과 공급업체가 전 세계 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에디가 23일(현지시각) 보도했음
- 이 보고서는 다국적 기업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음. 보고서에서 CDP가 분석한 다국적 기업들 중 40%만이 2050년까지 넷제로를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이들 기업의 20%만이 장기적인 기후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단기적 배출량 감축 목표를 실행하는 기업은 5% 이하로 나타났음
- 분석 대상인 157개 기업은 산업 배출량의 10%를 차지하지만 공급망과 스코프3 배출량을 고려하면 60%로 늘어났음
- 보고서는 “다국적 기업이 공급망의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배출량을 빠르게 줄이는 녹색 기술 이전을 장려하거나 지속 가능성 표준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다국적기업은 변화에 저항, 방해 또는 로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음
- 또 보고서는 녹색 부문에 대한 외국의 직접 투자가 2003년 이후 700%나 증가했으나, 오염 부문에 대한 투자는 80% 감소했다고 지적했음. 이어 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행동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국가 및 글로벌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음
- 이를 위해 보고서는 배출량을 모니터링(Patrolling), 법률과 규정(Prescription), 세금(Penalties), 인센티브와 재정 지원(Payments), 기업 약속과 정보(Persuasion)에 초점을 맞춘 5P 프로그램을 제안했음
- 먼저 적절한 모니터링(Patrolling)이 없으면 정책 입안자는 어떤 회사가 탄소 배출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했음. 다국적 기업은 2차, 3차 협력업체를 모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급망 전체에서 탈탄소화를 장려할 수 있는 잠재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임
- 둘째로, 기업의 기후 목표 강화를 위한 법률과 규정(Prescription) 당위성을 제시했음. 지난해 OECD 연구에 의하면, 법률과 규정(Prescription)과 관련해서 기후 목표를 강화하는 규정과 표준을 채택하면 저탄소 기술,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위한 경쟁의 장을 평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셋째로, 세금(Penalties)은 가격을 활용하여 화석 연료 및 기타 환경에 해로운 활동을 억제하는 동시에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 넷째로, 인센티브와 재정 지원(Payments)는 정책 입안자들이 특정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에 대해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뤄짐. 보고서는 정부가 나쁜 활동에 더 많은 비용이 들도록 기업에 대한 가격 신호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활동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주장했음

- 끝으로, 기업 약속과 정보(Persuasion)은 다국적기업의 행동을 형성하는 마지막 접근법으로, 기업 약속과 정보를 통해 설득하는 방식은 정치적 지원이 없거나 그런 도구가 문제에 적합하지 않을 때 쓰여야 한다고 밝혔음
- 분석에 참여했던 CDP의 최고 임팩트 책임자 니콜렛 바틀렛(Nicolette Bartlett)은 “글로벌 산업 배출량은 소수의 대기업과 공급망이 주도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근과 채찍이 모두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와 함께 더 강력한 기준과 환경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